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2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으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인성교육을 진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기본계획 수립시 인성교육 부작용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4조제4호).

나. 인성교육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학교장은 예방정책을 강구하도록 정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교육
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bokdung@edurang.net)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성교육의 부작용 예방대책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성교육 부작용 방지)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인성교육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부담 유발 방지 정책
2.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 발생 방지 정책
3.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학생생활기록부 등 기재 방지
4. 그 밖에 인성교육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성교육기본계획) (생략)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u><신설></u>	제4조(인성교육기본계획)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인성교육의 부작용 예방대책</u> 5.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인성교육 부작용 방지) 교육감</u> <u>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인성교육</u> <u>부작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u> <u>한다.</u> 1. <u>학생에게 새로운 학습부담 유발 방지</u> <u>정책</u> 2. <u>새로운 유형의 사교육 발생 방지</u> <u>정책</u> 3. <u>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학교생활</u> <u>기록부 등 기재 방지</u> 4. <u>그 밖에 인성교육 부작용 방지를</u> <u>위하여 필요한 사항</u>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04호, 2015.1.20., 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03호, 2015.7.20., 제정]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